



김정호(오른쪽) 변호사와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

## “전두환 회고록 허위” 대법 선고... 광주단체 “정의 확인”

광주전남 민변, 5·18재단 “5·18 왜곡·편향, 불법 행위 재확인”

광주지역 법조·5·18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 내 5·18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기재·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한 사자명예훼손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과 역사 정의를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전두환의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편향,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하여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5·18을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했다”며 “그러나 전씨는 2017년 회고록을 내며 5·18 왜곡과 편향을 시도

했고 이는 지난원 등 5·18 왜곡 세력의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5·18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편향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재판 직후 5·18기념재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대법원은 범인 역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출판자가 저자와 함께 출판 여부를 결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지위에 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고도 판시했다”고 밝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상 오월단체)와 고 조비

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속 적시된 ▲납과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을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과 과거사 진상 노력의 결과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또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조비오 신부를 향한 표현도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 측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고 회고록 출판 금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기동취재부

##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사령탑은 누구

40년 만의 통합 후 첫 단체인·교육감·지방의원 출마 러시  
현직 프리미엄 vs 여권 정치인·행정가·야권 ‘인지도 전쟁’  
민 계파 갈등, 합당 불발, 공천 틀, 이합집산 등 초미 관심  
제3후보, 무소속 돌풍, 3선 도전 성적표 등도 관전포인트

6·3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최대 분수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까지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40년 간 ‘한 지방 두 가족’을 유지해 온 광주·전남, 전남·광주의 대통합과 더불어민주당과 우당(友黨)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무산, 당·정과 여당 내 계파 갈등까지 정치적 비박과 변곡점이 흔해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불확실성과 긴박감, 모두 역대급이다.

합종연횡과 공천틀, 선거 규정, 제3인물 등관설까지 변수가 적잖아 선거판도는 예측불허하고, 무소속과 3선(選) 성적표 등은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다.

◆40년 만의 대변혁, 통합특별시 선거레이스 개막

6·3 지선은 한 뿌리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치러진다. 통합 단체인·교육감을 포함, 430명 안팎의 풀뿌리 일꾼을 선출하며,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초대 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민행배·신정훈·이계호·정준호·주철현(가나다 순) 의원과 이병준 전 의원, 여기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까지 거대 여당 민주당 주자만 8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표를 단질 예정이다. 이들은 AI 신성장동력과 에너지주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설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2월 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집중하며 후보 등록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에 주력하고 있다. 통합 특별시 초대 교육감과 특별시 산하 첫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뭉쳐야 산다” 이합집산 예고... 빅텐트 관심

최대 관심사인 민주당 경선이 특별법 통과 후 이르면 4월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판도는 선두권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초점전이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25~30%를 넘긴 독자 후보 없이 2강3중3약 내지 2강4중2약 구도가 뚜렷한 상황이다.

두터운 중의권에 부동층도 20%대에 달한 데다 학·지·혈연, 정치적 거점을 중심으로 한 ‘안방 효과’와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표 분산 현상도 선명해 후보 간 이합집산이 성패를 좌우할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선거구 확대도 후보자 수도 크게 늘어 결국 전략적 연대와 소위 ‘빅 텐트’가 허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위가 경선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역전극을 노린 결선 연대는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초광역 선거구 탓에 조직과 자금을 고려한 세력 합치기와 친명·친정계 간 합종연횡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선두권 후보가 중·하위권 1~2명과 손을 잡거나 중위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대세를 장악할 수 있다” “행정도, 정치도 ‘통합 시너지’를 노린 체급 높이가 치열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 관측이다.

◆동지에서 격(?) 민주·혁신 합당 불발

민주당 계파 갈등과 혁신당 내부 반발, 양당 은도차로 동침이몽은 결국 ‘썰’만 타다 오월동주로 무산됐고, 지역 선거판에는 후유증이 일고 있다.

소모적 살바싸움에 양측 모두 정치적 데미지가 불가피하게 됐고, 2024 총선 당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콜라보도, ‘호남 메기론’도 선명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중도층 이탈과 정당 지지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